

미군정기의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 기사와 이데올로기*

- 4·24 한신교육투쟁을 중심으로 -

이행화**
mua-winter@hanmail.net

이경규***
lk5120@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한신교육투쟁 관련 신문기사 |
| 2. 조선학교 폐쇄와 한신교육투쟁 | 4. 나오며 |

主 題 語: 미군정기(The US Occupation Period), 재일조선인(Zainichi Korean), 한신교육투쟁(Han-Shin Education Fight), 마이너리티(Minority), 조선학교(Korean Schools in Japan)

1. 들어가며

제2차 세계대전의 연합국 승리와 더불어 일본이 패전하고 그 때까지 피지배 민족이었던 조선은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나 미군정 체제(1)의 일본에 남게 된 재일조선인은 패전국 일본인의 처지에 비해 전혀 나을 바 없는 애매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일본 사회의 조선인 멸시 또한 전전이나 전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었다. 재일조선인이 일자리나 주거공간을 찾아 보는데도 일본인에 비해 늘 배제당하거나 힘든 일자리만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일본의 패전 직후 일본에 있던 약 200만 명의 조선인은 140만이 귀국하고 60만이 일본에 남게 된다. 귀국하지 않고 잔류를 선택하게 된 60만의 재일조선인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도일

* 이 논문은 1016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4914839)

**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일본어학과 교수, 교신저자

1) 여기에서 미군정기는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일본을 점령한 시기를 가리킨다.

후의 생활이 오래 되다보니 조선에서의 생활 기반이 빈약하여 선뜻 귀국을 선택할 수 없는 불안 요인이 존재했다. 게다가 재일조선인들이 어렵사리 모은 재산을 반출할 수 없도록 한 미군정의 자본 반출 제한 정책이 더 큰 문제인 경우도 있었다.²⁾ 비록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곧장 조국으로 돌아갈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전후의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조선인들은 자신들을 지켜내고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결성해야 했다.

좌파 성향의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과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거류민단(민단)이 그 대표적인 조직이다. 해방 직후 마소 군정 하의 분할 주둔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찬반 갈등을 비롯한 한반도의 혼란스러운 상황 못지않게, 재일조선인 사회도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으로 양분되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학교 폐쇄령,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 재일본조선인연맹 해산 등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에 당시의 미디어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도되고 어떠한 관점에서 기사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당시의 재일조선인 사회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신교육투쟁에 관한 재일조선인 관련 미디어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의 신문 기사 수집과 검색에는 동시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을 활용하기로 한다.⁴⁾ 한신교육투쟁에 관련한 선행연구에는 김경해(2006)⁵⁾, 최영호(2007)⁶⁾, 김인덕(2008)⁷⁾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민족교육이나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으며 「해방신문」 등 조련 계열의 미디어 기사 내용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련중앙시보(朝連中央時報)」, 「문교신문(文教新聞)」, 「민주신문(民主新聞)」 등의 재일조선인 관련 마이너리티 신문에 등장하는 한신교육투쟁 관련 기사를 수집하여 이들 미디어 기사의 내용 분석과 각 미디어 간의 기사화 관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김태기(1999)「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국제정치논총』제38권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p.251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가 귀국을 주저하는 원인이기도 하였지만, 자본 반출을 제한하는 GHQ의 귀환정책이 실제적인 원인이었다. GHQ는 조선으로 인계하는 귀환자는 지참금 1,000엔 이하와 휴대할 수 있는 동산을 250파운드로 제한하였다.

3) 이경규(2019)「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문화 기사 고찰」『일본근대학연구』제63집, p.104

4) 이경규 외(2018)『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 1』박문사

5) 김경해(2006)『1948년 한신 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경인문화사

6) 최영호(2007)「재일한인 민족교육운동에 나타난 대외연대네트워크」『한일민족문제연구』제13집, 한일민족문제학회

_____ (2008)「해방직후 재일한인 민족교육의 특징과 한계」『한일민족문제연구』제1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7) 김인덕(2008)「1948년 한신교육투쟁과 재일조선인 역사교육」『한일민족문제연구』제1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 조선학교 폐쇄와 한신교육투쟁

미군정의 전후계획의 목표가 일본의 경우에는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신도주의의 해체 및 민주주의화였으며, 조선의 경우에는 식민지 잔재 청산과 민주주의화였다. 그러나 조선인에 있어서 식민지 잔재 청산은 한민족의 고유문화와 역사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미군정은 식민지 잔재 청산의 의미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군국주의와 국가주의, 신도주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한민족 고유문화와 역사의 회복을 의미하지 않았다.⁸⁾ 일본에 대한 점령 정책의 기본적인 목표는 군국주의와 국가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주의의 수립인데 반해, 조선에 대해서는 신탁통치를 통한 민주주의적 독립정부 수립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만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전후 정책이 재일조선인에게는 더욱 애매한 상황을 만들었을 것이다.⁹⁾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식민지 기간 동안에 억압당했던 사회 개혁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계열 재일조선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되었다.¹⁰⁾

미군정기인 1945년 8월부터 1952년 4월까지 일본정부는 때로는 미군정과 함께, 때로는 미군정을 대신해서 재일조선인을 통제하고 행정권을 행사하는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었다.¹¹⁾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좌파 성향의 조련은 황민화 정책과 동화정책의 지배를 받아온 재일조선인에게 민족성, 즉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은 바로 우리말을 되찾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재일조선인들은 즉시 조선학교를 설립하고 그 자녀들에게 조선어와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다. 일제강점기에 억압받아왔던 민족교육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에너지가 일거에 분출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본 전국에 500개가 넘는 조선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그러나 조선학교가 일본 정부의 간섭 없이 민족교육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겨우 2년 정도에 머물러야 했으며 1948년 1월부터는 미군정과 일본정부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8) 김인용(2008)「해방 전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교육정책」『교육사상연구』제22권 제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p.16

9) 박창건(2018)「GHQ 점령기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9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p.147 연합국 최고사령부(GHQ)는 재일조선인 문제를 전후 처리의 부수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대일점령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따라서 GHQ는 재일조선인을 일본 식민지 유산에서 파생된 소수민족으로서의 특수한 역사적 형성과정을 무시하고 문제로 파악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재일난민 정책을 입안했다.

10)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920년 이후 알려지기 시작하여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1) 윤희상(2006)『그들만의 언론』천년의시작, p.13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국과 소련의 양 진영을 중심으로 동서냉전이 격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정부는 미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면서 미국 진영에 앞장섰다. 이에 따라 재일조선인들과 그들의 민족교육 문제에 대해 자본주의 진영의 입장에서 평가하게 된다. 그러면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은 자본주의 진영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것으로 비쳐졌고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검열과 폐지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1948년 미군정의 지시 아래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단속하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정책에는 일제강점기의 동화교육정책을 모델로 삼았다. 일본정부는 미군정과 사전에 의논하여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의 교육법령에 따라 교육할 것을 지시하고 재일조선인 자녀들을 일본학교로 전학하도록 통지했다. 일본의 교육법령은 일본 국민의 육성을 목적으로 일본인 교사가 일본어 교과서를 사용해서 일본어로 교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일본 국민을 육성하는 교육인 것이었다. 재일조선인의 민족주의가 기존 통제시스템에 대한 정치적 반항의 거점이 될 수 있고 바로 일본의 공산주의와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미군정은 일본정부를 통하여 지방 행정당국에 통달을 내려 보내도록 하는데 조선학교의 폐쇄 명령이었다.¹²⁾ 조선학교 폐쇄 명령은 재일조선인들의 엄청난 반발을 촉발하였고 전국적인 투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재일조선인들이 조선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이 시작되었는데, 이들 민족교육의 현장인 조선학교의 폐쇄에 대해 처음으로 반대투쟁에 돌입한 곳이 야마구치현(山口縣)이다. 그 당시 야마구치현에는 귀환하려는 조선인 1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는데, 야마구치현 지사가 조선학교를 폐쇄한다고 통고했다. 이에 대해 1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현청에 집결하여 교섭하면서 철야시위를 전개했다. 그 결과 현 당국은 조선학교 폐쇄 통첩의 철회를 인정하게 된다. 이후 4월에 들어서는 히로시마(広島), 오카야마(岡山), 효고(兵庫), 오사카(大阪) 등지로 투쟁이 확산되었다. 가장 격렬한 투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오사카와 고베(神戸)이다. 이를 「한신(阪神)교육투쟁」이라고 부른다. 오사카에서는 조선인 집회 군중들에게 발포하여 소년 김태일(金太一)이 사망하였고, 고베에서는 지사에게 폐쇄명령 철회각서를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는데 4월 24일이 가장 격렬한 투쟁이 벌어진 날이라는 점에서 「424 한신교육투쟁」이라고 부르기도

12) 金慶海編(1988)「學校教育局長通達朝鮮人設立學校の取扱いについて」『在日朝鮮人民族教育擁護闘争資料集』(I), 明石書店, p.450 학교폐쇄령에 따르면, 「일본에 잔류하는 조선인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194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학교교육법(1947년 3월 31일 법률 제26호) 및 동일부터 적용되는 동법 시행규칙(1947년 5월 23일 문부성령 제11호)의 제조건에 매우 부적합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학교를 계속 경영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학령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정규학교(일본의 소학교를 일컫음)에 취학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4월 8일까지 반드시 입학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한다. 학교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호자는 1천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다.

오사카에서는 1948년 4월 23일 부청 앞의 오테마에(大手前)공원에서 조선학교 폐쇄 반대 및 교육 자주권 옹호를 위한 인민대회가 개최되어 3만여 명이 집결했다. 무장 경관에 의한 탄압으로 23명이 중상을 입고, 200여 명이 검거되었다. 4월 26일에도 조선학교 폐쇄 반대 인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 과정에서 일본 경관의 발포로 소년 김태일이 죽었고, 검거자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고베에서는 4월 7일 조선학교 폐쇄 명령을 발령하고 집행하고자 했다. 이에 반발해 재일조선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저항이 나타났는데, 니시고베(西神戸) 조선인소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온몸으로 교문을 막고 저항했다. 이 사건은 이후 주요 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이후에도 고베에서는 저항과 투쟁이 계속되었는데, 특히 4월 24일 조선학교 폐쇄에 항의하는 조선인들이 효고 현청 앞에 집결하여 조선학교 폐쇄 명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효고현과 고베시 당국은 학교폐쇄 명령을 철회한다는 문서에 조인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그날 밤 효고현 군정부가 전후(戰後) 유일한 「비상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지사가 서약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무효라고 밝히면서 미군정과 일본정부는 경찰을 통해 조선인 및 일본인 관련자를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기 시작했다. 한신교육투쟁의 빌미가 되었던 미군정과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 민족학교 탄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연맹은 조직적으로 대응했고, 재일조선인은 일본 전역에서 전면적인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¹³⁾

3. 한신교육투쟁 관련 신문 기사

미군정과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폐쇄 결정, 그리고 이에 대한 재일조선인들의 강력하고 조직적인 반발과 저항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재일조선인 관련 마이너리티 신문에서는 어떠한 내용의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조련중앙시보」, 「민주신문(민단신문)」, 「문교신문」 등에 실린 보도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13) 김경해(2006)『1948년 한신 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경인문화사, pp.49-56

<표1> 조련중앙시보

발행일	권호	지면정보	기사제목(원문)
1948.04.30	第33·34号	01頁01段	救国運動と教育斗争
1948.04.30	第33·34号	01頁07段	日本政府の頑迷さ 神戸事件に対し朝連中総声明
1948.04.30	第33·34号	01頁07段	在日各団体に招請状 救国斗争に参加を要請
1948.04.30	第33·34号	02頁01段	老若男女民族を問わず獄内外相互応して-兵庫県の例
1948.04.30	第33·34号	02頁01段	各方面理解を深くす 中央の交渉経過
1948.04.30	第33·34号	02頁03段	強力な斗争に知事届す 岡山県斗争経過
1948.04.30	第33·34号	02頁04段	成果をあげた京都 部分的闘争に終らすな
1948.04.30	第33·34号	02頁05段	神戸事件 調査団派遣
1948.04.30	第33·34号	03頁08段	教育自主性を認めよ 不当弾圧反対大会開かる
1948.04.30	第33·34号	04頁01段	日政、朝鮮人弾圧を企図
1948.04.30	第33·34号	04頁05段	在日朝鮮人教育の実情(2) その過去と現在 日本にきた朝鮮人
1948.04.30	第33·34号	04頁09段	朝鮮人教育問題に関し 日本の人民に訴う!
1948.05.14	第35号	01頁03段	民族文化の危機
1948.05.14	第35号	02頁01段	朝鮮人教育問題一応協定成立 私立学校の自主性で朝鮮人独自の教育 日本法令に従い 認可申請
1948.05.14	第35号	02頁01段	<教育問題>覚書細目決定 文部省各地方長官あて指令発す
1948.05.14	第35号	02頁04段	教育問題に対する中央の交渉経過
1948.05.14	第35号	03頁01段	神戸・大阪事件の責任は誰にあるか?
1948.05.14	第35号	03頁01段	<神戸事件>大衆の圧力に逃げ回る知事ら 反動を利用して挑発
1948.05.14	第35号	03頁03段	教育問題解決に際し 朝連中総声明書発表
1948.05.14	第35号	03頁05段	北平在留朝鮮人 日本政府の指令に抗議
1948.05.14	第35号	03頁07段	<大阪事件>見よ! この陰謀と無誠意 戦犯、特高を横縦に駆使
1948.05.14	第35号	03頁09段	在米朝鮮人委員会声明 実情を調査せよ 神戸事件は虐殺の結果
1948.05.14	第35号	03頁09段	文教部長 会議召集
1948.05.14	第35号	04頁01段	<神戸事件>日本民主団体調査団声明 世界平和に関連する重大問題なり
1948.05.14	第35号	04頁02段	<神戸事件>日本民主団体代表と共同調査団出発
1948.05.14	第35号	04頁05段	不当弾圧に共に闘おう 金薫氏祝辞
1948.05.14	第35号	04頁06段	神戸・大阪事件 公判斗争 準備進む
1948.05.14	第35号	04頁08段	日本政府に抗議 少年射殺の責任追及
1948.05.21	第36号	01頁01段	教育弾圧に抗して
1948.05.21	第36号	02頁01段	在日朝鮮人学校事件 真相調査団報告会ひらく

1948.05.21	第36号	02頁01段	こもごもさけぶ反動政策 五百聴衆の胸を打つ
1948.05.21	第36号	02頁03段	神戸事件その後 組織は急速に再建中 中総派遣調査団の活動成果上る
1948.05.21	第36号	02頁04段	教育斗争先進のため 第五回全国文化部長会議
1948.05.21	第36号	02頁07段	火事泥で一もうけ 阪神事件における建青の背族行為
1948.05.21	第36号	02頁08段	朝鮮教育者協会より激 民族の言語は不滅 民族の生命守れ!
1948.05.21	第36号	02頁10段	大阪事件起訴拘禁者名 起訴65名 拘禁35名
1948.05.21	第36号	03頁01段	在日朝鮮人学校事件真相調査団 みて来た阪神学校事件 渡邊三知夫氏の報告(1)
1948.05.21	第36号	03頁04段	さながら「朝鮮人狩り」の神戸 -九日間の獄中記(上)-
1948.05.21	第36号	03頁06段	教育問題犠牲者を救おう 解放運動救援会動く
1948.05.21	第36号	03頁08段	救援基金取扱いに就て
1948.05.21	第36号	04頁01段	在日朝鮮人教育の実情(3) その過去と現在 弾圧と文盲が最大のはなむけ
1948.05.21	第36号	04頁07段	教育弾圧の発端は建青の密告から
1948.06.04	第38号	02頁01段	<大阪事件公判>解放の歌声も高く 朝鮮語使用を主張 武装警官の出動は何故?
1948.06.04	第38号	02頁04段	<大阪地方>出張を終えて(中) 中総派遣團一同
1948.06.04	第38号	03頁01段	在日朝鮮人学校事件真相調査団 みて来た阪神学校事件 渡邊三知夫氏の報告(完)

<표1>의 기사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련중앙시보에서는 고베와 오사가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교육투쟁에 관한 기사 내용이 신문의 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한신교육투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다양한 기사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군정과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선학교 폐쇄의 부당성에 대해 펼쳐지고 있는 대대적인 저항 운동과 투쟁 과정, 한신교육사건 진상조사단의 활동 보고, 그리고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문제 해결과 자주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섭 활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朝鮮人教育問題に関し 日本の人民に訴う!

朝鮮人教育問題はいよいよ重大化して来ました。終戦後始めての非常事態宣言が発令され一日に一千名以上が検束されたと言う歴史的なレコードを作り上げました。そしてこれは神戸又は大阪のみの問題でなく、その火の手は東京に飛び且つ全国的に拡大されんとしております。いな、政府はわざと拡大しようとしてつとめているようにも思えます。われわれの要求はこうであり

ます。

- 一、朝鮮人学校に於ての教授用語は朝鮮語を用いる。
- 一、朝鮮人学校に於て使用する教科書は朝鮮初等教材編纂委員会によって編纂され総司令部民間情報教育局の検閲をえて発行したものをを用いる。
- 一、朝鮮人学校の経営管理は学校単位にその学父兄が中心となって民主的に組織した自主的な学校管理組合がこれをなす。
- 一、日本語を正科として教える。

以上の要求(朝鮮人の自主性)を認めればわれわれは教育基本法のわくの中で認可を受け、私立学校として再出発するというのであります。¹⁴⁾

教育問題に対する中央の交渉経過

教育問題に関し中央では連日文部当局及び司令部当局と交渉を続けているが、交渉は続々として進まず、その前途には困難が予想される。

1、文部当局関係

四月二十七日首相官邸を訪問し首相の面会を要請したが、首相不在のため有田官房長官に面会、四月二十二日に提出した六項目の要求案件に対し交渉を進めたが何等発表見ることが出来ず、関係責任者と連絡し同日内再度会議することを約し一日引き上げたが同日午後五時四十分より約三時間に亘って交渉した結果次の如き第一次会議の回答書を提示した。<中略>

2、司令部関係

四月二十八日午前十時司令部民間情報教育局責任者オア氏を訪問した。氏の態度は好転した感じがあった。彼は最後までわが要求を否認する言辭はなかったが、教科書問題において先日参考に提供した教科書を指摘し「この立派な教材をそのまま文相の認定を受け使用すればよいではないか」といった。そして氏は明二十九日直接文部大臣とたびたびあうよう語り、文部大臣と面会した後また会うよう約束して別れたが彼は特に兵庫、大阪事件に対し遺憾の意を表した。

3、参議院衆議院議會関係

参議院、衆議院各文教委員会を訪問して意見書と参考書類を提出し、議会でもこの問題を提起して円満な解決をし得るよう要請した。<以下、省略>¹⁵⁾

재일조선인의 교육문제는 단순히 고베나 오사카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쿄를 비롯하여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조선인학교에서의 교수용어나 교과서 문제, 학교경영 주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일본당국에 제시하고 조선인 교육

14) 「朝鮮人教育問題に関し 日本の人民に訴う!」『朝連中央時報』第33-34合併号, 1948.04.30

15) 「教育問題に対する中央の交渉経過」『朝連中央時報』第35号, 1948.05.14

자주권의 관철을 위해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이다. 그리고 문부성, 미군정, 참의원과 중의원의 문교위원회와의 그 동안의 부단한 교섭 과정을 전하며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 실현을 위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 내용이다. 다시 조련중앙시보의 사설의 일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主張>民族文化の危機

神戸事件およびその他の事件は以上の意図による日政の挑発に対し、在日同胞が民族の自主性を守るため、全く自発的に立ち上ったものであり、一部の扇動によって、躍らされたものでは断じてない。これを共産主義者が扇動したと、吠え立てる民団や建青の諸君は日政のわが民族抹殺政策に服従するものであり、民族自主性を死守すべく起き上った大衆の人格を侮辱し、自らは朝鮮民族ではなく、日本天皇の忠臣であることを暴露しているにすぎない。<中略>最後に反動当局と結託して朝鮮民族文化を抹殺しようとする朴烈一派、天皇の忠臣に対し日本に帰化するよう勧告するものである。16)

<主張>教育弾圧に抗して

決してわれら朝鮮人は日本の法律を拒否または無視するものではなく、むしろ法の根本精神を尊重すればこそ朝鮮人児童に朝鮮の言語による自主教育をさせるのが自然であり、もっとも正しい道であることを主張した。しかるに日本政府は、われらのこのような誠意や努力に対してなんといったか、朝鮮人の主張は特権を要求するものであり特権を主張することは治外法権を要求するものである、朝鮮人が日本にいるということは日本の国籍を保持することになるから、日本人と同様日本の法律に従わ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治外法権は許さないというのである。<中略>われらはもっとも広汎な世界の良識にわれらの正当な要求を訴えると同時に対抗して人間の基本権和を承認させる時まで世界人民と共に闘うであろう。17)

위의 사설을 살펴보면, 한신교육사건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 자주성을 진정으로 지켜내기 위해 비롯된 투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민족말살정책을 극복하고 조선인의 자주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조선인 아동 교육이 우리말인 조선어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연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폐쇄령의 근거로 들고 있는 학교교육법 적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은 일본의 법률 위반도 아니며 특권으로서의 치외법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민단과 건청 등 우파적 성향의

16) 「<主張>民族文化の危機」『朝連中央時報』第35号, 1948.05.14

17) 「<主張>教育弾圧に抗して」『朝連中央時報』第36号, 1948.05.21

재일조선인 단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¹⁸⁾ 이러한 조련과 민단 사이의 첨예한 대립은 학교폐쇄령에 대한 입장 차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2> 민주신문(민단신문)

발행일	권호	지면정보	기사제목(원문)
1948.04.24	第42号	01頁02段	朝鮮人學校閉鎖指令について
1948.05.01	第43号	01頁02段	朝鮮人學校閉鎖指令問題 居留民団中央總本部で声明 張本人は共産黨員 死して同胞に罪を謝せ
1948.05.01	第43号	01頁02段	學校閉鎖指令と共産主義
1948.05.01	第43号	01頁07段	授業はなお漸続 不当な弾圧にはイデオロギーを捨て闘争へ
1948.05.08	第44号	02頁03段	閉鎖指令もなく 有為な二世教育に専念
1948.05.08	第44号	02頁07段	阪神事件の導火線は 未だ醒めぬ排他的な日政、大衆の犠牲を要求する朝連
1948.05.08	第44号	04頁08段	阪神事件も両国民の理解が不足
1948.05.15	第45号	03頁01段	朝鮮人學校問題その後 被告の釈放を懇請 民団中総ア中將に陳情書を送る
1948.05.15	第45号	03頁02段	閉鎖は堪えられず 朴烈民団団長芦田氏に書簡送る
1948.05.15	第45号	03頁06段	學校の問題は解決 民団文相今後の方針を懇談
1948.05.15	第45号	03頁07段	自主性は認める 文部省、地方官庁に通牒

우선, 민주신문의 경우에는 조련중앙시보에 비해 학교폐쇄령 관련 기사의 분량이 적으며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 중심의 단편적인 입장을 밝히는 정도의 보도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조선학교 폐쇄 명령에서 비롯된 첨예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민단이 미군정 및 일본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한신교육사건 발생 원인은 지나치게 배타적인 일본 정부와 대중의 희생을 통해서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련이 도화선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18) 박열은 해방을 맞이하여 1945년 10월 27일 아키타형무소에서 석방되는데, 복역하는 동안 무정부주의에서 우파적 성향으로 전향하여 공개적으로 반공주의 노선을 천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강훈, 원심창 등과 함께 1946년 1월 20일 신조선건설동맹(건동)을 결성하고, 같은 해 10월 3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재일조선건국축전동맹(건창) 등과 통합하여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을 결성하여 초대 단장에 취임하게 된다.

朝鮮人學校閉鎖指令について

東京都教育局が三月二十四日付の文部省通達「朝鮮人學校取扱いについて」にもとづいて、学校教育法十三条に違反する朝鮮人學校に、十九日までに学校教育法による私立中学校としての設立手続きをとらぬときは學校閉鎖を命ずると通知を發し、1)朝鮮人學校が日本の教科書を使用すること、2)日本語を國語として教えること、3)朝鮮語その他は課外授業として教えることを指示しているが、これは明らかに不当なる弾圧である。<中略>教育の自主性と、市民の自主性とは異なる。吾々が日本の一市民として生活する上においては日本の社会規範を守るのが当然であるにしても、民族文化、教育の上にも、日本の法的規律を押し付けられるということは心外に耐えぬ。19)

自主性は認める 文部省、地方官庁に通牒

文部省學校教育局長の名で各都道府県知事宛に發した「朝鮮人學校問題について」という通牒の内容要旨は次の通り、この際過去の日本政府が朝鮮人の教育及びに取扱について遺憾な点多々あったことを深く反省改正し、今後の處理に當っては善意と親切とを旨とし兩民族の將來の親善に寄与するよう取り計われないなむ今後の處理に當っては左記事項に留意の遺憾なきよう取り計われない。一)覚書中の「私立學校として自主性が認められる範囲内」とは次の二つを意味する。(イ)朝鮮人自身で私立の小学校中学校を設置し義務教育としての最小限度の用件を有し、その上は法令に許された範囲内において標準教材自由研究及び課外の時間に朝鮮語で朝鮮語、歴史、文学、文化等朝鮮人独自の教育を行うことができる。但し、この場合教科書については連合國軍總司令部情報教育部の檢閲をうけたものを用いる。<中略> 六)今後朝鮮語教育問題については各地方庁は朝鮮人の學校責任者及び文教責任者の意見を充分聴取した上解決に努力されたい。20)

위의 인용문을 살펴보면, 학교폐쇄령의 통지 내용을 알리고 조선학교가 일본 교과서 사용, 일본어를 국어로 사용, 조선어는 과외수업으로 해야 한다는 지령에 대해서 조선인의 민족 문화나 교육마저도 일본의 사회규범이나 법적규율을 따르라는 것은 조선인의 자주성을 심하게 혼드는 처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학교폐쇄령에 관련된 기사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은 가운데, 미군정이나 일본당국의 발표 내용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있는 점,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점 등이 앞서 살펴본 조련중앙시보의 기사 내용과는 묘한 대조를 이룬다.

19) 「朝鮮人學校閉鎖指令について」『民主新聞』第42号, 1948.04.24
20) 「自主性は認める 文部省、地方官庁に通牒」『民主新聞』第45号, 1948.05.15

<표3> 문교신문

발행일	권호	지면정보	기사제목(원문)
1948.04.05	第29号	01頁01段	学校閉鎖の惡令を即時撤回せよ
1948.04.05	第29号	02頁01段	本會山口県支部に学園朝連の集団暴力に脅さる -崔鄭・兩調査員の報告書
1948.04.26	第31号	01頁01段	学校閉鎖令に再警告す
1948.04.26	第31号	02頁02段	<決然立って教育の自由權を戦取せよ!>さらに新たなる試練 在日兒童教育問題いまや重大化
1948.04.26	第31号	02頁05段	在日同胞教育問題は 米人顧問とも協議し本国政府で -吳文化部長談
1948.04.26	第31号	02頁05段	本国の文化団体總けつ起-在日同胞教育保護委員會設置
1948.04.26	第31号	02頁08段	在日同胞の教育は本国教育令によって-安, 民政長官談
1948.04.26	第31号	02頁08段	民族文化を抹殺する日本-南鮮女同抗議文
1948.04.26	第31号	02頁08段	学校閉鎖の波に抗し検束あるも授業を断続-東京における 闘争
1948.04.26	第31号	03頁02段	日政同胞子弟教育問題干渉は「不完全な法律」が根拠だ
1948.05.03	第32号	02頁01段	<朝鮮人学校問題>教育を政治団体から切り離せ總司令部 真意問題
1948.05.03	第32号	02頁05段	学校教育上の特權は認める 但し政治学校の存在は反対-東京 軍政府声明発表

문교신문의 기사는 학교폐쇄령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미군정과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련중앙시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족 문화와 교육의 자주권 수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기사 내용이 많고 민단이나 건청 등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인 단체에 대해 대립적인 내용의 기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련중앙시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主張>学校閉鎖の惡令を即時撤回せよ

本會は四月四日特に第五回臨時總會を本部に召集して慎重なる討議を重ねた結果、文部省に対し当該命令書の撤回を要求する傍ら猛省を促すと同時に、万一我々の正当なる主義が受け入れざる場合に於て断固闘争に入るべきことを決議し、特設学校対策委員會を設置して本格的活動を開始したのである。我々は次の理由によって日本政府に我々の子弟を委託し得ざることを茲に声明する。<中略>自ら反省し斯る身の程知らぬ野望が早急に精算されざるべからざることを茲に厳肅に忠告するものである。21)

<主張>学校閉鎖令に再警告す

戦勝国アメリカでさえも日本教育の自立性を容認し、アメリカ教育法や英語による教育を強制しないばかりか、反って日本民主化のために甚大な援助を惜しまないというのに、己が受けている恩恵に自慰し、いさゝか増長してきた日本が、敗戦国の分際で外国人に日本語を強要しているということは身の程知らぬ愚か者というべきであり、愚昧極まる日本指導者の本質が、こゝにも遺憾なく暴露した好例として全世界にこれを紹介したいものである。日本政府はいつまでも反省もせず、野卑なる島国根性の奴隷となって朝鮮人の正当なる主張を無視するに於ては、近き日に必ずや正義の天誅が汝らの頭上に炸裂するであろうことを重ねて警告し敢えて猛省を促すものである。22)

문교신문의 사실을 살펴보면, 일본정부에 대해 학교폐쇄령의 철회와 반성을 촉구하고 재일 조선인의 아이들을 일본학교에는 절대로 맡길 수 없다는 결의와 동시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일본정부의 잘못된 조선인학교 폐쇄 결정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고 충고하는 글의 사실이다. 그리고 학교폐쇄령에 대해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교육투쟁이 벌어졌던 4월 24일 이후의 사실 내용은 일본정부에 대해 보다 더 자극적인 언어 표현을 통해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의 조롱 수준의 사실이 등장하기도 한다.

4. 나오며

지금까지 재일조선인 관련 마이너리티 신문에 등장하는 한신교육투쟁 관련 기사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조련중앙시보의 기사를 살펴보면, 고베와 오사카 일대에서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던 재일조선인의 교육투쟁에 관한 기사 내용이 신문의 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한신교육투쟁의 상황에 대해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다양한 기사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군정과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조선학교 폐쇄의 부당성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 운동과 투쟁 과정, 한신교육사건 진상조사단의 활동 보고, 그리고 재일조선인들의 교육문제 해결과 자주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인 교섭 활동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음을

21) 「<主張>学校閉鎖の悪令を即時撤回せよ」『文教新聞』第29号, 1948.04.05

22) 「<主張>学校閉鎖令に再警告す」『文教新聞』第31号, 1948.04.26

확인할 수 있었다.

민주신문의 경우에는 조련중앙시보에 비해 학교폐쇄령 관련 기사의 분량이 적고 내용면에 있어서도 사실 중심의 단편적인 입장을 밝히는 정도의 보도가 많았다. 그리고 조선학교 폐쇄 명령에서 비롯된 첨예한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민단이 미군정 및 일본 당국과의 적극적인 교섭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기사도 등장한다. 그러면서 한신교육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 지나치게 배타적인 일본 정부와 대중의 희생을 통해서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련이 도화선을 제공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문교신문의 기사는 학교폐쇄령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미군정과 일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련중앙시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민족 문화와 교육의 자주권 수호라는 측면을 강조한 기사 내용이 많고 민단이나 건청 등 우파 성향의 재일조선인 단체에 대해 대립적인 내용의 기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련중앙시보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좌파 성향의 「조련중앙시보」와 중도와 성향의 「문교신문」 기사는 한신교육투쟁을 둘러싼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자주적인 민족교육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좌파 성향의 「조련중앙시보」 기사 내용이 민족이라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중도적 성향의 「문교신문」 기사는 교육의 자주권 수호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하고자 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파 성향의 「민주신문」 기사의 경우는 한신교육사건의 발생 원인을 배타적인 일본 정부와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련의 태도에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민족의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집단 사이에서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인하여 서로 분열되고 극한 대립하는 혼란상을 이들 마이너리티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강덕상 외(2007)『재일한국인의 역사』역사넷
 김경혜(2006)『1948년 한신 교육 투쟁 -재일조선인 민족교육의 원점-』경인문화사
 _____(2008)『1948년 한신교육투쟁은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투쟁』『한일민족문제연구』제1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김인덕(2008)『1948년 한신교육투쟁과 재일조선인 역사교육』『한일민족문제연구』제1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김인용(2008)『해방 전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교육정책』『교육사상연구』제22권 제3호, 한국교육사상학회
 김태기(1999)『GHQ/SCAP의 對 재일한국인정책』『국제정치논총』제38권 제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박창건(2018)『GHQ 점령기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39집,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윤희상(2006)『그들만의 언론』천년의시작
 이경규 외(2018)『전후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미디어 해제 및 기사명 색인 1』박문사

이경규(2019)「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문화 기사 고찰」『일본근대학연구』제63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이행화·이경규(2018)「미군정기 재일조선인 발행 신문의 사설 고찰 -『민주신문』,『조선중앙일보』,『문교신문』-」
『일본근대학연구』제60집, 한국일본근대학회

최영호(2007)「재일한인 민족교육운동에 나타난 대외연대네트워크」『한일민족문제연구』제13집, 한일민족문제학회

_____ (2008)「해방직후 재일한인 민족교육의 특징과 한계」『한일민족문제연구』제15집, 한일민족문제학회

타케마에 에이지(2007)『GHQ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평사리

佐野通夫(2012)『在日朝鮮人教育關係資料』(1),明石書店

_____ (2012)『在日朝鮮人教育關係資料』(2),明石書店

「<主張>学校閉鎖の悪令を即時撤回せよ」『文教新聞』第29号, 1948.04.05.

「朝鮮人学校閉鎖指令について」『民主新聞』第42号, 1948.04.24.

「<主張>学校閉鎖令に再警告す」『文教新聞』第31号, 1948.04.26

「朝鮮人教育問題に関し 日本の人民に訴う!」『朝連中央時報』第33-34合併号, 1948.04.30

「教育問題に対する中央の交渉経過」『朝連中央時報』第35号, 1948.05.14

「<主張>民族文化の危機」『朝連中央時報』第35号, 1948.05.14.

「自主性は認める 文部省、地方官庁に通牒」『民主新聞』第45号, 1948.05.15

「<主張>教育弾圧に抗して」『朝連中央時報』第36号, 1948.05.21

논문투고일 : 2019년 04월 05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 要 旨 >

미군정기의 재일조선인 관련 신문 기사와 이데올로기

이행화·이경규

한반도는 해방 직후 마소 군정 하의 분할 주둔으로 신탁통치에 대한 좌우익간의 찬반 갈등에서 비롯된 조국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더불어, 원래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를 공유하고 있던 재일조선인 사회도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으로 양분되어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인학교 폐쇄령과 한신교육투쟁 등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했다. 이에 당시의 미디어에서는 이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도되고 어떠한 관점에서 기사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당시의 재일조선인 사회에 관한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신문 중에서 좌파 성향의 「조련중앙시보」와 중도파 성향의 「문교신문」 기사는 한신교육투쟁을 둘러싼 해방된 민족으로서의 자주적인 민족교육을 옹호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좌파 성향의 「조련중앙시보」 기사 내용이 민족이라는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중도파 성향의 「문교신문」 기사는 교육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접근하고자 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우파 성향의 「민주신문」 기사의 경우는 한신교육사건 발생 원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배타적인 일본 정부와 대중의 희생을 통해서 무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련이도화선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 같은 민족의 재일조선인 마이너리티 사이에서도 이념적으로 서로 분열되고 극한 대립하는 혼란상을 극명히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Zainichi Koreans-themed News Articles and Ideolog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ance of Japan

Yi, Heang-Hwa·Lee, Gyeong-Gyu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war period has been engulfed in turmoil as interior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came to exacerbate over a trusteeship of it under the divided occupancy of the U.S. and Soviet military governments. Against such a tumultuous geopolitical backdrop, zainichi Korean society, which had long been closely bound up with the shared sentiment of having the same ethnic roots as Koreans, could not escape either from a fierce dissonance brought about as a consequence of the left-right ideological divide engendered within it. It was, in this sense, the occurring amid this upheaval of a series of such events as, for example, the 1948 Hanshin Educational Struggle (阪神教育事件), zainichi Koreans-mobilized nationwide demonstrations protesting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Powers (GHQ)'s decision on the closure of ethnic Korean schools that came as a great shock to zainichi Korean society overall. This article thus examines the ways in which ethnic Korean media at that time framed and reported those events, thereby exploring one of the facets reflective of then zainichi Korean society on the whole.

Of zainichi Koreans-published ethnic minority newspapers circulated in postwar Japan, the respective news articles featured in the leftist Choryun Jungang-shibo (朝連中央時報) and the moderate Bunkyo-shimbun (文教新聞) tended to be focused mainly on stories surrounding the Struggle which were in support of an independent ethnic education for zainichi Koreans as a liberated ethnicity. What could possibly distinguish between them lies in that, while the former's articles were inclined to place a particular emphasis on their ideological aspects pertaining to ethnicity (minzoku), the latter's on their overall editorial stance geared towards freedom of education. By contrast, those in the rightist Minsyu-shimbun (民主新聞) tended to blame for a root cause behind the occurrence of the Struggle Choryun's rather excessive stance in favor of addressing it to the detriment of both ultra-exclusionary Japanese government and the public. It can therefore be found in light of this context that the news articles of these three ethnic Korean newspapers manifest a chaotic situation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an ideological split and a consequent violent confrontation clearly visible even among zainichi Koreans.